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12. part2 제 88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 규제 샌드박스 ' 첫 적용은 블록체인 · 드론...文정부 규제개혁 본격화 3
2. 혁신도시 시즌 2...국가 균형발전 노린다 4
3.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오리무중’ 5
4. 靑 규제 샌드박스 추진에 野 “프리존법 먼저” 6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남경필 “문재인 정부 성공 기업규제 완화 ·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 7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일자리 절반이 서울 경기에...경제력 수도권 집중 심화 9
2.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 ‘규제 프리존’ 된다 10

1.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은 블록체인·드론...文정부 규제개혁 본격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Enews

02

주요내용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드론을 확정

- 새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유망 서비스·기술을 개발한 후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상용화를 가속화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
 -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9월 1일)한 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이 결정돼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됨
-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프리존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정책 양대 축
 - 규제프리존이 '지역' 중심 규제개혁이라면 샌드박스의 중심은 '아이템'
 - 유망한 신산업·신기술을 정해 상용화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식
- 기재부 등 부처간 논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드론을 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 42억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
 -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40억원을 투입
- 기재부 관계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파급 효과와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 같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지만 블록체인과 드론의 접근 방식은 다소 다름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고를 거쳐 유망 서비스를 발굴한 후 상용화에 어떤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지 찾아 샌드박스를 적용
 - 상용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회 발의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드론은 지난 달 '특별승인제'가 시행돼 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별도 법 개정 과제도 없음
 -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시간대,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도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게 핵심
 -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이후 특별승인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목표
- 국토부 관계자 : 론은 특별승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규제개혁 고도화 차원이 될 것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본격화 하며 규제개혁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규제프리존에도 관심이 쏠림
 - 규제프리존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핵심
 - 추진 근거를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며, 최근 여야가 합의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성이 거론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찬성하는 만큼 민감한 세부 내용만 조율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

2. 혁신도시 시즌 2...국가 균형발전 노린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

- 이를 위해 내달 정부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 을 내놓을 계획
-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를 지정해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용적률 등 입지규제 완화, 투자 선도지구 선정 등 인센티브도 강화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 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지역민 대상 장학금도 확대
- 정부는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해 산업 단지가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올해 92 개인 산·학·연 연구개발 (R&D) 협의체를 내년 100 개로 확대하고, 산·학 융합지구도 올해 7 개에서 내년 15 개로 늘리기로 함
- 또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 을 내년 1 월과 10 월에 각각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틀을 확립
 - 지역별 특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계획 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 계획 계약제도는 지자체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과 자원배분안 등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가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아울러 정부는 현행 8 대 2 구조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 대 3 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 대 4 로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정분권 종합대책' 을 내년 2 월 중에 내놓을 계획
 - 지자체의 능동적 자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3.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오리무중’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제신문

02

주요내용

■ 정부가 27 일 ‘2018 년 경제정책 방향’ 을 발표하면서 내년 1 월 중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라는 지적

-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균특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기 때문
- 지난 9 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야당의 잇따른 보이콧 탓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음
 - 11 월 국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산자위가 열리지 못했음
 - 이달 19 일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개정안 의결이 되지 않았음
 - 균특법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어 산자위가 열리기만 하면 내년 1 월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
- 균특법 개정안은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역위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균형발전 정책 관련 예산의 편성과 배분에 대한 의견 제출권 강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지역위가 예산안의 편성과 배분 조정권을 갖게 되면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10 조 원 중 생활 분야 5 조 원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능을 하게 됨
-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지적
- 균형발전의 중추 기능을 하는 지역위가 핵심 기능을 가져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
- 그러나 황태규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출범 7 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

4. 靑 규제 샌드박스 추진에 野 ‘프리존법 먼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28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입법절차가 필요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내년도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

- 보유세 인상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경우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보유세 개편
 - 정부는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발표할 계획
- 그동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먼저 불을 지핀 만큼 여당에서도 세법 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자칫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올리는 방식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음
- 규제 개혁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갈림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반면 야권은 몇 년째 공방만 벌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음

1. 남경필 “문재인 정부 성공 기업규제 완화·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02

주요내용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 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 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겠다’ 고 밝힘
 - 전체적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될 게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규제 완화’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임금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
 - 따라서 규제 완화의 핵심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 되어야 함
 - 기업이 공급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함
 - 정부가 나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토지·자본 등이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주어야 함
-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
 - 높은 땅값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 토지공급이 좀 더 원활해져야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공급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
 - 수도권 규제는 경제적 비효율, 투자유치 실패, 도시경쟁력 저하,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 등 많은 부작용만 양산
 - 이제는 규제에 대한 철학을 과감히 바꿔야 함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음
 -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함

1. 일자리 절반이 서울 경기에...경제력 수도권 집중 심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02

주요내용

■ 기업체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

- 정치권과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데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 우리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구조 개혁 작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5 년 경제총조사 결과' 를 분석
- **사업체수**
 - **2015 년** : 전 국 의 사 업 체 수 387 만 4000 개 중 경 기 가 82 만 8000 개 (21.4%), 서 울 이 82 만 1000 개 (21.2%) 로 두 지역이 전체 42.6% 를 차지했다. 3 위인 부산은 27 만 9000 개로 7.2%
 - **2010 년 비교** :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14 만 1000 개) 였고 서울 (9 만 1000 개), 경남 (3 만 8000 개) 등 순
 - 경기의 경우 도·소매업 (4 만개), 제조업 (3 만 3000 개) 부문에서 증가
 - 서울은 도·소매업 (2 만 4000 개), 전문·과학·기술 (1 만 4000 개), 숙박·음식점 (1 만 1000 개) 등의 순으로 증가
- **종사자 수**
 - **2015 년** : 서울이 510 만 9000 명으로 전국 2088 만 9000 명 중 24.5% 로 1 위
 - 경기는 465 만명 (22.3%), 부산 137 만 2000 명 (6.6%)
 - 서울의 경우 도·소매업 (91 만 2000 명), 숙박·음식점 (48 만명), 전문·과학·기술 (45 만 2000 명), 경기는 제조업 (124 만 8000 명), 도·소매업 (66 만 4000 명), 숙박·음식점 (44 만 1 천명) 순으로 많음
 - **2010 년 비교** :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90 만 1000 명) 이며 다음은 서울 (62 만 2000 명) 이 증가
- **지역별 매출액**
 - **2015 년** : 역 시 서 울 이 1622 조 4260 억 원 으로 가 장 많 고 , 경 기 (1066 조 5510 억 원), 경남 (305 조 5390 억원) 등
 - 서울의 경우 금융·보험 (496 조 850 억원), 도·소매업 (456 조 5490 억원), 건설업 (154 조 4830 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는 제조업 (455 조 8400 억원) 이 가장 많음
 - **2010 년 비교** :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260 조 6030 억원) 이며 다음은 서울 (256 조 6350 억원), 인천 (58 조 4270 억원) 등의 순
- **영업이익**
 - **2015 년** : 울이 83 조 3740 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79 조 8410 억원), 경북 (24 조 3520 억원) 등
 - 영업이익률은 세종이 10.6% 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제주 (9.0%), 경북 (8.7%)
 - **2010 년 비교** :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 (-4.4%p), 울산 (-4.0%p), 전남 (-3.9%p)
- **전국의 노동생산성은 2 억 4480 만원으로 2010 년 대비 130 만원 감소**
 -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 인당 실질매출액을 뜻하는 것
- **우리 경제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벗어나고자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지역 : 울산 (6780 만원), 전남 (4180 만원), 충남 (3530 만원) 등
 - 울산과 전남은 제조업, 금융·보험 등의 부진으로 감소, 충남은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의 부진 때문
- **노동생산성**
 - 2015 년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2 억 6580 만원이며, 비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2 억 2240 만원

1. 일자리 절반이 서울 경기에...경제력 수도권 집중 심화

02

주요내용

- 2010 년 대비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620 만원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950 만원 감소
- 수도권의 모든 지역은 금융·보험과 도소매업 등의 호조로 생산성이 증가
- 비수도권 내에서는 제조업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
- **지역별로 노동생산성**
 - 울산이 4 억 4400 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 (3 억 1450 만원), 충남 (3 억 600 만원), 전남 (2 억 5930 만원), 경북 (2 억 5650 만원)
 - 노동생산성이 높은 업종인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남
 -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 (1870 만원), 대전 (1260 만원), 광주 (1180 만원) 등
 - 제주는 공공행정, 출판·영상·방송, 건설업 등의 호조에 기인하며, 대전은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제조업 등의 호조로 증가
 - 광주는 부동산·임대,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등의 호조 때문
-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내국인 인구는 4970 만 6000 명으로 전국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는 77.9 개이고 인구 1 명당 매출액은 1 억 690 만원
 - 지역별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를 보면 제주 (93.4 개) 가 가장 많고, 강원 (89.0 개), 서울 (85.8 개) 등
- **지역별 인구 1 명당 매출액**
 - 울산 (2 억 1440 만원) 이 가장 많고, 서울 (1 억 6960 만원), 충남 (1 억 3470 만원) 등
 - 2010 년과 비교하면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는 8.0 개가 증가했고, 인구 1 명당 사업체 매출액은 1660 만원이 증가
- **인구 1000 명당 사업체 수**
 - 증가가 많은 지역은 전남 (10.9 개), 경북 (10.9 개), 전북 (10.7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 년 보다 인구 1 명당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2780 만원) 이며, 충북 (2270 만원), 대전 (1890 만원) 등

2.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규제 프리존' 된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동아사이언스

02

주요내용

■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가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하는 '규제 프리존' 으로 거듭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을 확정, 발표
 - 연구개발특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자율주행차·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안전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
- '테스트베드형 연구개발특구' 는 올해 10 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일자리정책 5 개년 로드맵' 에 따른 것
 -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앞서 지난해 5 월 박근혜 정부도 지역 단위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을 내놨지만,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상 다른 법에 의한 꼭 필요한 규제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음
- 이번 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특구에서 신산업 분야 기술을 검증할 때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 사항만 금지) 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특례를 받게 됨
 - 가령 '항공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비행가능 시간대와 구역, 고도 등에 규제를 받는 드론도 특구 안에서는 일부 금지사항만 준수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비행시험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아예 규제 자체가 미비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
 -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는데 특구를 활용하면 이전보다 빠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
- 정부는 기존 방식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음
 - 특구 난립에 대한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
 - 이에 따라 강력한 추가 지정 요구가 있었던 동해안권, 충북 지역구의 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백지화
- 대신 연구소와 대학, 병원, 공기업 등을 아우르는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강소특구' 를 지정해 역시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
 - 전체 지정 면적이 20 km²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도 적용
 - 병원이 특구에 포함되면 기존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의 규제를 받았던 유전자 교정치료제 연구 등 다양한 신약 개발 연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
- 한편 17 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8 년 예산안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로 포함
 -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첫 적용 대상은 블록체인과 드론
 -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42 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40 억 원을 투입